

4050 통신비 제외... 중학생 돌봄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용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 4차 추경 합의... 절감한 5206억원 독감 접종 등 확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석 전 지급 위해 野 의견 절충 불가피"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과 관련, 연령별 선별 지급 기준을 내놴.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지급 원칙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도, 통상적인 소득·자산 기준과는 다른 이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주요 포털에서는 '만 나이 계산기'가 주요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초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애초 9200억원으로 예정됐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1인당 2만원)' 항목이다.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

개 연령대로 좁히는 방식으로 약 5206억원을 감액했다.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13~15세는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35~64세 계층이 고스란히 '추경 사각지대'로 남은 셈이다.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추경 지원의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교육책이라는 것이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용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

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상의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지원대상 선별에 상당한 행정자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지급'이라는 속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연령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에게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4050'으로 상징되는 핵심 경제활동계층이 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추경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모순세가 연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35~64세를 중심으로 불

만 섞인 여론도 나오는 분위기다.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5206억원은 다양한 항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일부 확대(105만명)와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 지원 등이다.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조인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기존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의료진이나 감염병 전문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 정장과의 통화에서 받은 조언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전체 4차 추경의 규모는 애초 7조8000억원에서 274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중앙지검,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수사 25일 정대택씨 고발인 조사... 추미에 "성역 없는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정씨는 앞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그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정정래 의원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도 고발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제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중앙지검 형사6부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의 부인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최근 시민 4만명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공수사권 이관해도 인력 안넘겨" 국회 출석... "북한내 동향 파악에 인력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의 유관 인력을 강제로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대공수사권 기능이 이관될 경우 인력도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자발적 지원 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경찰에서 자

재 인력으로는 아직 능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며 "법안소위 때 심층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을 두고 탈북민의 재입북 사태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박 원장은 "최근 10년간 재입북자가 29명 정도 되고 그중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6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탈북자들의 북한 내 동향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다"며 "재입북 동기는 회유 협박, 범죄, 외로움 등 다양하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불붙은 박덕흠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되나

피감기관서 수천억 공사 수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휘방 한도위 사보임도 이해충돌 지적... 민주당 "무조건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미에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한 것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 의원이 직접 한도위를 방문, 법안의 특정 내용을 막으려 했었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

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원들을 사보임할 때 적절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달라"고 지적했다. 원내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박 의원의 전날 해명 기자회견을 두고 "반성 대신 뻔뻔한 변명만, 발뺌과 궤변만 난무했고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몰아세웠다. 문 의원은 "박 의원은 오였나무 아래서 갖을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오였을 모조리 훔친 것"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공

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0년간 박 의원 가족회사가 한국도지주매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 5건의 금액이 총 473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놴.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던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백지신타 주시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이라면서 박 의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음성골프장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위원장을 지낸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조합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라며 "조합이 골프장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8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들어갔다

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간 추미에 법무부 장관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정치개혁TF를 꾸려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민 의힘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덕흠 의혹은 국회 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6월 다시 제출한 법안이 있고, TF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 별도 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해충돌 발생시 국회 윤리특위와 연결해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5·18 보상금'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

민중 송재호 의원 법안 발의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갑·정무위)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중추진위원회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518보상법 2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실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 별도

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으로 명시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경매 물건
<p>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p> <p>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p> <p style="text-align: center;">"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